

의안 번호	616
----------	-----

【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8. 3. 10 (월) · 장정옥의원외4인발의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8. 3. 10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8. 3. 13(목)

2. 제정이유

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위해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중구 주민으로써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에 대하여 지원함. (안 제3조)
- 나.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셋째 아이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,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. (안 제4조)
- 다. 지원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(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신청)하고, 동장은 공부등을 확인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이 지급여부 결정 지급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)

4. 근거법규

가.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, 제21조, 제22조

나. 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, 제9조, 제10조

5. 예산 확보 사항

○ 총 예산액 : 112,200천원(시비 93,500천원, 구비 18,700천원)

○ 출산장려금 지원 : 74,800천원

-시비: 56,100천원 (1인 300천원 × 187명)

-구비: 18,700천원 (1인 100천원 × 187명)※'08년도 확보

○ 양육비 지원 : 37,400천원

-시비: 37,400천원 (1인 200천원 × 187명)※'08년도 확보

※ 1인 600천원 ('07년도 300천원)

6. 조례안 - 따로 붙임

7. 기 타

○ 조례 관련 현황 : 『붙임 1』 참조

○ 관련 법규 : 『붙임 2』 참조

8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중구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중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서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기준, 신청절차, 그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을 경우 환수토록 하는 규정등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, 2005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.08명, 2006년도에는 1.1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상승 하였으나 OECD 평균인 1.6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및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
- 울산광역시도 붙임 출산율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4년에 5%감소, 2005년 6.4% 감소되다가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.5%증가되었고, 우리 중구는 2004년 12%감소, 2005년 10.9%감소하여 2006년도에 5.2%가 증가 되었지만 2004년 출생아 보다는 낮습니다. 다소 증가한 것은 쌍춘년으로 일시적 결혼 커플과 출생아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는데. 이를 계기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 임.

더우기,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·양육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사회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나가야 하겠음..

-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때 출산 감소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으로 돌리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과제라 생각 되며,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• 운영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임.
- 다만,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상 어렵지만 향후 구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예산확보 와 더불어 출산장려 정책의 정착 및 활성화등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【 별 첨 1 】

조례 관련 현황

□ 전국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○ 54개 단체(광역시1, 시25, 구11, 군17)

- 서울 6(구), 인천 3(구2, 군1), 광주 3(구), 대전 1(광역시), 경기 6(시), 강원 7(시3, 군4), 충북 1(시), 충남 6(시3, 군3), 전북 4(시1, 군3), 전남 6(시4, 군2), 경북10(시 6, 군4), 경남 1(시)

※부산, 대구, 울산, 제주 : 없음

□ 연도별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 현황

(단위 : 명)

연도별		계	1자녀	2자녀	3자녀이상	미상
2003	시	11,652	5,539	4,974	1,052	87
	중구	2,320	1,120	957	217	26
2004	시	11,093	5,611	4,434	969	79
	중구	2,071	1,085	801	169	16
2005	시	10,421	5,405	4,043	902	71
	중구	1,866	1,006	679	166	15
2006	시	10,685	5,573	4,156	861	95
	중구	1,963	1,039	737	170	17

※자료원 : 통계청(2003 ~ 2006)

□ 출산율 연도별 추이

(단위 : 명)

구 분	2003	2004		2005		2006	
울산광역시	11,652	11,093	△5.0%	10,421	△6.4%	10,685	증2.5%
중 구	2,320	2,071	△12.0%	1,866	△10.9%	1,963	증5.2%

※자료원 : 통계청(2006)

□ 2006년도 구·군별 3자녀 이후 출생아 현황

(단위 : 명)

계	중 구	남 구	동 구	북 구	울주군
956	187	248	198	146	177

※자료원 : 통계청(2006)

□ 연도별 및 출산순위별 출생아 현황

구 분	2자녀 이후	3자녀 이후	전 출생아	조례
중 구		60만원 (시50, 구10)		없음
남 구	출산용품 (10만원상당)	70만원 (시50, 구20)		“
동 구		60만원 (시50, 구10)		“
북 구		60만원 (시50, 구10)		“
울주군		60만원 (시50, 군10)	보험가입 (26,350 원×2 월)	보험관련조례

※시비 50만원 : 출산장려금 30만원 + 양육비20만원

구비 10만원 : 출산장려금

□ 2007년도 중구 출산장려금지원 현황

동별 구분	계	학생	반구 1	반구 2	북산 1	북산 2	북정	옥교	성남	우정	태화	다운	병영 1	병영 2	약사
지원 인구	176	8	14	4	6	7	19	4	7	16	18	28	22	16	7
지원 금액	88,000	4,000	7,000	2,000	3,000	3,500	9,500	2,000	3,500	8,000	9,000	14,000	11,000	8,000	3,500

※자료원 : 보건소

【 별 첨 2 】

건강가정기본법

제8조 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,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·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1조 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
5. 직장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형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0.17>

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 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 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